월요광장



박석 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우리 민족이 당한 최고의 수모는 병자 호란 때 인조가 삼전도에 나와 청나라에 무릎 꿇고 항복한 사실이다. 그보다 더 비 참한 수모는 왜놈에게 나라를 빼앗긴 일 이다. 나라 없는 민족의 서러움도 참아내 기 어려운 일인데, 민족의 근원과 뿌리까 지 말살해버린 창씨개명이야말로 모든 수모와 수치 중의 극점이었다. 일제 말기, 조선인으로 누구라는 이름이 있는 사람 이면 왜정에 징발당하고, 젊은이들에게 는 전쟁에 참여하라는 선동 열성원으로 활동하고, 앞장서서 창씨개명에 호응하 는 사람들만이 잘 먹고 잘 사는 지위를 유 지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어렵던 망국의 세월, 그래도 역 사는 정의의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민족 의 선구자들이나 애국지사들은 끝내 학 병 동원의 연설에도 거부하고, 끝까지 창

굶어 죽어도 창씨개명은 못한다

씨개명에도 거대한 거부를 감행했던 의 인들이 있었다. 호남에서의 그 대표적 인 물이 바로 화순 출신 매하 양태승(梁泰 承: 1889~1955) 교장 선생님이었다.

매하(梅下)는 1889년 화순의 다라실 마 을에서 정암 조광조의 친구이자 기묘명 현으로 명성이 높던 학포 양팽손의 후손 으로 태어났다. 전통적 유학자의 가문에 서 태어나 유교 경전으로 높은 교양을 얻 었을 때, 나라의 운명은 이미 기울어, 뜻 있는 젊은이들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 었다. 17세이던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 되어 국권이 상실되는 위기를 맞자, 매하 는 솟구치는 의분심을 참지 못해 삶의 방 향을 바꾼다. 유학 사상만으로는 나라를 구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새로운 세계와 학문을 접하기 위해 상경의 뜻을 품었다. 20세이던 1908년 마침내 상투를 싹둑 자르고 서울로 향했다.

새로운 학문을 배워야 민중을 계몽시 킬 수 있고, 새로운 세계관을 지녀야 나라 를 건질 방책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서울에서 기본적인 신교육을 받던 중 22 세이던 1910년 나라는 끝내 망해버리니, 눈물을 머금고 매하는 일본으로 건너가 고베신학대학에서 종교철학과 교육철학 을 전공하고 귀국하였다.

이후 조국 광복과 민족 해방의 밑거름

을 쌓기 위한 민중 계몽과 민족 교육의 험 난한 길을 걷기 시작했다. 전북 고창에 둥 지를 틀고 학교 교육을 통한 민중・민족 교육을 실현하려고 민립학교 설립에 심 혈을 기울인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매 하의 끈질긴 노력에 감복한 고창의 유지 들이 거금을 희사하여 1919년 최초로 민 립 고창고등보통학교가 문을 열었다.

설립자이자 초대교장이던 매하는 전국 의 명성 높은 교사들을 초빙하였다. 학교 가 본궤도에 오르자 '북오산 남고창'이라 는 호칭처럼 북의 오산고보, 남의 고창고 보라는 양대 민족학교가 조국 광복의 터 를 닦는 일을 해내게 되었다. 뒷날 대구의 계성학교에 교감으로 초빙되어 그곳에서 도 민족 교육에 헌신했으나, 여러 사정으 로 고향 광주로 낙향하여 사회단체에 관 여하면서 조국 광복을 기다렸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 정책은 더욱 험악하여 학병 동원 연설원을 강요하고 창씨개명까지 강제하자, 아무런 생계대책도 없이 온 가 족을 이끌고 충북 보은군의 속리산으로 숨어버린다.

초근목피로 연명하면서 우국지사의 지 조를 지킬 때, 가족들의 고통은 얼마나 심 했겠는가. 그때 매하의 큰 아들 양동만은 일본의 입교대학교 출신으로 함흥의 영 생고보 교감으로 있어서 먹고는 살아갔

는데, 창씨개명을 하지 않는 한 학교에 재 직할 수 없었다. 아들이 그 사정을 매하에 게 말하자 "굶어 죽을지언정 창씨개명은 못한다"라는 엄명을 내려 아들은 하는 수 없이 짐을 싸들고 속리산의 가족과 합하 고 말았다.

그때가 어떤 때인데 매하는 그런 무서 운 결단을 내릴 수 있었고, 굳은 선비의 뜻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때 민족의 지도 자들이라는 사람들 대부분이 학병 동원 연설을 하고 또 창씨개명으로 자신의 지 위를 보전하던 때, 매하는 무슨 정신으로 그런 불행을 자초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

민족의 선구자, 조선의 선비정신은 그 렇게 무서운 것이다. 해방 후 고관대작의 모든 제의를 거절하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다면서 보은농고 교장으로 계시다가 그곳에서 세상을 뜨고 말았다. 이런 의인 이자 민족교육의 선구자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매하 양태승 평전'이 나온 지 오래이고, 최근에는 민족 교육의 공로자 로 '국민훈장 무궁화장'까지 추서되었으 나 세상은 아직도 그분을 기억해주지 않 는다. 민중 계몽과 민족 교육의 뛰어난 선 구자를 지금이라도 기억하고 그분의 뜻 을 기려야 하리라.

社 說

반려견 문화 확산 '펫티켓'부터 잘 지켜야

반려견 문화가 확산하면서 아파트에 서 기르는 개가 이웃을 물어 숨지게 하 는 등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공원이나 산책길에 나설 때 갑자기 달 려들거나 접근하는 개를 보고 놀란 적 이 한두 번은 있을 것이다. 견주 입장에 서는 개를 믿겠지만 상대방은 놀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애완견 자체를 싫어 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펫티켓' 문화 정착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유명 한식당 대표가 자신이 사 는 아파트에서 아이돌 가수 가족의 반 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다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반려동물 관리와 안전 조 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 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도 매년 개에 물리거나 관련 사고로 병원에 이송되 는 사건이 100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개에 물리거나 관련 사 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2014년 1889건에서 2016년 2111건으로 매년 10%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맹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심심찮 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노 인이나 어린아이 사고였다는 점에 심 각성이 있다.

법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처벌은 약 하고,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물 보호법과 시행규칙에는 반려동물과 함 께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 조치를 하 고,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커다란 맹견은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처 벌은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전부다.

먼저 견주들은 목줄이나 입마개 착용 이 동물 학대가 아닌 개의 사회화 훈련 이고, 주인에겐 순종하는 소형견일지라 도 낯선 이에겐 맹수로 돌변할 수 있다 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와 함께 반려 견 동반 시 안전장치를 하지 않는 견주 에 대해 과태료를 대폭 올리고, 맹견과 관련해서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견주 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맹견 관리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신고리 원전 공론조사 지역 현안 해결 모델로

건설 중단과 재개를 놓고 극심한 갈 등을 빚었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가 다시 시작된다. 공론화위원회가 최 종 공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설 재개 를 정부에 권고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 령이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 난 20일 "시민참여단 471명에 대한 최 종 4차 공론 조사 결과 건설 재개는 59. 5%, 중단은 40.5%로 나타났다"고 밝 혔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양쪽 의견의 편차는 19%포인트 차이가 나 는 것으로 확인돼 공론화위원회가 정 한 오차 범위 ±3.6%포인트를 넘었기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며 정부에

공사 재개를 권고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또한 이번 조사에서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자는 의견이 53. 2%, 유지하자는 35.5%로 각각 나타났 다며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 로 추진하는 정책 결정을 하라"고 정부 에 권고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향후 원전은 축소해야 한다는 절묘한 선택 을 내놓은 것이다.

독일과 일본을 벤치마킹한 이번 공 론 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뤄진 숙의(熟議) 민주주의 방식의 의 사 결정이다. 국가 주요 정책인 원전 건설에 대해 중립적인 인사들로 공론 화위원회를 꾸리고 대표성을 지닌 시 민 대표들이 학습과 토론의 숙의 과정 을 거쳐 집단 지성으로 의견을 모아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

공론화위의 활동 기간이 너무 짧았 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번 공 론 조사는 의미가 적지 않다. 찬반이 엇갈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 는 다른 갈등 사안을 해결하는 모델이 될 수 있어서다. 광주·전남의 묵은 현 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무안공항・ 광주공항 통합, 옛 전남 도청 복원 문 제 등에 대해 이를 적용해 해법을 찾 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

법조칼럼

법관 임용 절차



서 지 원 광주지방법원 판사

법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광 주지방법원에서 운영하는 멘토링(법관 1 인이 학교 1곳을 맡아 법원 견학, 진로 강 의 등 법 교육 및 진로교육을 하는 것)에 서 학생들이 자주 묻는 말이다.

법조 일원화 제도의 시행으로 예전처 럼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서 바로 법관으로 임용될 수는 없고, 일정한 법조 경력을 갖춘 후 비로소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일반 법조 경력자 임용 절차를 통해 작 년에 법관으로 임용된 필자의 경험을 바 탕으로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 절차에 관 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

'법조 일원화'는 법관을 일정 경력의 변

호사 자격자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를 말 한다. 이는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 수원을 수료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 해 법원 내에서 경력을 쌓아가도록 하는 제도인 '경력 법관제'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수있다.

2011년 법원 조직법의 개정으로 2013 년부터 법조 일원화가 전면적으로 시행 됐다. 법조 일원화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 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 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법원 조직법 부칙에서 경과 규정 을 둬 2013~2017년도에는 법조 경력 3 년 이상, 2018~2021년도에는 법조 경력 5년 이상, 2022~2025년도에는 법조 경 력 7년 이상으로 법관 임용 자격이 단계 적으로 상향되다가,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요구된다.

필자는 법무관과 로펌 변호사로 재직하 다가 2016년 6월 초 법관 임용 신청을 했 고, 2016년 12월 1일 법관에 임명됐다. 법 관 임용 절차는 임용 신청→법률 서면 작 성→실무 능력 평가 면접→인성 역량 평 가 면접→각종 의견 조회→최종 면접→명 단 공개→임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임용 신청 시에는 이력서, 소정의 양식 에 따른 자기소개서, 본인이 작성한 법률 서면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적지 않았 다. 그중에서도 구체적인 법률사무종사 경력, 법관 지원 동기 등을 기재해야 하는 자기소개서 작성에 상당히 공을 들였던 것 같다.

다음으로 법률 서면 작성은 제시된 소 송기록을 검토해 쟁점별로 결론과 논거 중심으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었다. 이틀에 걸쳐서 민사 법률 서면 작성 (5시간)과 형사 법률 서면 작성(4시간)을 해야 했다.

이후에는 실무 능력 평가 면접과 인성 역량 평가 면접이 진행됐다. 실무 능력 평가 면접은 사례 형태의 문제를 일정 시 간 검토한 후 면접관 앞에서 검토 결과를 간단하게 구두로 설명하고 면접관과 질 의응답을 하는 방식이었다. 지원자 대부 분이 법관 임용 절차 중 가장 까다로운 절차라고 입을 모았고, 필자도 그렇게 느 꼈다. 실무 능력 평가 면접에서는 지원자 의 선택에 따라 전문 분야에 대한 면접도 실시되었는데, 로펌에서 주로 도산 관련 사건을 처리한 필자로서는 전문 분야에 관한 법조 경력도 평가받을 수 있어서 좋

그리고 인성 역량 평가 면접은 면접 직 전에 제공되는 가상의 상황에 대해 면접 관과의 질의응답 등이 실시되는 절차인 데, 최초 제공되는 가상의 상황에 관한 질 의응답 후 이를 약간씩 변형한 상황에 대 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소속 기관장 등에게 법관 임용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인 각종 의견 조회와 최종 면접이 끝난 후 명 단 공개와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를 거쳐 법관에 임명됐다.

로펌 변호사 업무와 약 6개월이 소요 되는 법관 임용 절차를 병행하는 것은 만 만치 않았다. 그렇지만 법관 임용 절차를 통해 법관으로서의 사명감과 포부를 굳 건히 하고, 좋은 법관이 되기 위해 더욱 매진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다. 법 관 임용 절차와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법원에서 마련한 법관 임용 홈 페이지(judges.scourt.go.kr)를 찾아보 면 된다.

기 고

2017 국제농업박람회, 생명 공학 산실로



박수철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

전남도 농업박람회가 벌써 15년째 접 어들었다. 2002년 소규모로 문을 연 농업 박람회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박람 회로 성장하였고, 이제는 전 세계가 관심 을 갖는 국제박람회로 우뚝 섰다.

박람회 초기에는 지역별 특산품을 구 경하고 구입하는 장소 정도로 인식됐다. 이제 농축산물 전시와 판매, 체험 행사에 그치지 않고 농기자재를 비롯한 신기술,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농업 생명 공학 분 야까지 확대됐다.

15회째를 맞는 2017 국제농업박람회 는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슬로건으 로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1일간 열린다. 국제박람회답게 올해는 31개국 390개 기관·단체·기업이 참여할 예정이 며, 45만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행사 내용이나 관람객 규모 면 에서 정상에 오른 국제박람회라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남도의 최대 고민은 인구가 늘기는 커녕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가 줄면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예산 지원과 개발에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지자체마다 인구 늘이기에 총력전을 펼 치고 있다.

이를 위해 귀농·귀촌 적지임을 알리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방안과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전남 인구 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맞벌이에 따른 양육의 어려움 등 이 겹쳐 인구 수가 줄고 있는 국가적 현상 과 맞물려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전남도는 한반도 남단에 위 치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물류 비용이 그 만큼 크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인구 증가 를 가로막는 태생적 장애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농도인 전남도는 농축산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관광 분야 에 전념하는 게 바람직하다. 농축산과 관 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박람 회가 획기적인 돌파구로 활용될 수 있다. 전남도의 예상처럼 농업박람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자가 늘어 글로벌 박람 회로 성장하게 됐다. 이를 통해 전남의 농 축산물 우수성과 친환경 농업 메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 머무르는 박람회로 발전해 전남 관광 산

업과도 연계, 부가가치를 한층 높이는 효 과도 거두고 있다. 이제는 구경하고 스쳐 가는 박람회가 아니라 소통과 비즈니스 활성 장소로 진화하였고, 농업 생명 공학 메카로 인식되는 부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가 주최하는 국제농업 박람회는 농업 생명 공학의 산실로 진화 할 경우 소득을 향상시키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박람회를 통해 전남도의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외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전 남의 농축산물은 물론 전국의 생산품이 외국으로 대량 수출될 때 국제경쟁력은 그만큼 커지고 전남도민과 농업인의 소 득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선진 농업 국이 박람회에 참여함으로써 시야를 넓 혀 농업 기술을 향상시키고 국제 네트워 크를 형성하는 데도 일조할 것이다.

2017 국제농업박람회가 비즈니스 박람 회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적절한 선택이다. 또 이스라엘·네덜 란드(ICT), 캐나다·미국(곤충산업), 일본 (6차 산업), 스페인(유기농) 등의 농업 선 진국들이 참여한다니 기대가 크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내에 마련할 올해 박람회장은 모두 5개 마당 14개 전시·판 매관으로 구성한다. 농업 역사와 홍보, 청 년 농업을 위한 농풍마당을 비롯해 농기

술 혁신, 홍보 판매, 상생 교류, 전시·체험 마당 등이 들어선다.

이 가운데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곳 은 혁신 기술 마당이다. 첨단 농업 기술과 미래 농업이 소개되기 때문에 신기술을 통 한 소득 증대와 웰빙, 나아가 농업 생명 공 학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 겨주는 곳이다. 특히 미래 식량 대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곤충 산업관은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제일의 친환경 농업 선도지역인 전남도가 국제농업박람회를 개최하는 것 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는 인식을 확산 시키는 것이 전남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도 영향을 미친다. 이를 통해 전남도가 친 환경 유기농과 창조 농업의 선두 주자로 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다. 또 국내외에 농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확대해 농업을 교류하고 교역을 확대시 켜 나갈 수도 있다. 도시와 농촌 간 교류 를 확대함으로써 상호이익 증진과 귀농・ 귀촌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전남도가 주최하는 국제농업박람회는 올해도 성공을 거둘 것으로 확신한다. 대 성을 기원하면서 앞으로 농업 생명 공학 분야 쪽으로 큰 물줄기를 형성해 농업 분 야에서 생명을 다루는 기술의 산실로서 진화하기를 기대한다.

無等鼓 🕠

용서

'용서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용서 했다'고 한다. 웬만한 일이라면, 눈 꽉 감고 숨 몇 번 들이쉬면 가능할 수도 있 을 게다. 하지만 상대가 부모·형제·자 식을 죽인 '원수'라면, 용서한다는 것 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설령 그런 용 서를 했다고 한들, 한밤중 깨어나 눈물 짓게 하는 평생의 고통과 번민까지 함 께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개인적인 관계에서야 다를 수도 있 겠지만, 국가나 민족과 같은 대규모 공 동체 차원에선 '용서'

보다는 '단죄'를 앞세 우는 것이 철칙이다. 감정에 치우친 용서

는 자칫 사회 공동체의 구성과 유지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너뜨 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자행한 홀로코스트(대학살)에 피해를 입었던 주변 국가들이 70년이 훨씬 넘은 지금 까지도 전범을 추적해 엄벌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흘렀더라도' 용서 가 아닌 처벌이 원칙임을 보여 주는 사 례다.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친일 논 란에 휩싸이고, 아직까지도 일본과 껄 끄러운 관계를 이어 가는 것도 해방 이 후 기득권층의 이런저런 핑계에 밀려

친일 잔재를 제때, 제대로 청산하지 못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얼마 전 5·18기념재단 등 5월 단체들 이 집단 발포 명령자 그리고 행방불명 자 암매장지를 알려 주는 핵심 제보자 들에게 면책이나 포상을 법적으로 보 장해 줄 것을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다. 처벌이나 단죄 위주로 진상 규명 작업 이 이뤄지다 보면 적극적인 제보를 이 끌어 내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족과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잘못

> 을 뉘우치고 양심선 언을 한다면 기꺼이 용서할 수 있다는 입 장도 밝히고 있다.

5·18은 광주·전남 지역민이 붉은 피 를 흘리며 쌓아 올린 한국 민주주의 역 사의 기념비이자 이정표다. 따라서 5. 18의 가해자로서, 무려 37년간이나 '그 날의 진실'을 왜곡하고 숨겨 온 세력에 게 용서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5월 단체들은 '진실을 밝히 겠다'는 일념으로 아버지·남편·아내· 아들·딸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가해자 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 만큼 감춰진 진실을 드러낼 수 있 는 진심 어린 증언이 있기를 고대한다.

/홍행기 정치부장redplane@

光则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나 제 부 220-0663 〈대표 FAX 222-4918〉 (FAX 222-493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